

▣ 박근종 칼럼

GDP 대비 통화량 미국 두 배, 원화 약세·성장동력 약화의 악순환 끊어야



기업의 자산을 필요한 시기에 손실 없이 화폐로 바꿀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시중 유동성(liquidity)을 보여주는 통화량이 넉 달 연속 8%대 큰 폭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시중에 풀린 과도한 유동성이 환율과 집값 불안의 근본 배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지난 1월 14일 발표한 지난해 11월 '광의통화(M2 | 총통화)' 평균 잔액은 전년 동월 대비 8.4% 늘어난 4,067조 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광의통화(M2) 증가율은 지난해 8월 이후 넉 달 연속 8%대(8월 8.1% → 9월 8.5% → 10월 8.7% → 11월 8.4%)를 웃돌고 있다. 8%대 증가율은 2022년 7월(8.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M2는 시중 유동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현금·요구불예금·수시입출식 예금 등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의미한다.

한국은행은 이번 통계부터 기존 M2에서 상장지수펀드(ETF) 등 수익증권 등을 제외한 기준을 적용하는데 신 계열 기준 증가율은 4.8%다.

신·구 계열 기준 모두 M2 증가율은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다. 신 계열 기준 한국의 M2 증가율은 지난해 10월 기준 5.2%로, 미국(4.6%), 유로(EURO) 지역(3.1%), 영국(3.6%), 일본(1.1%) 등보다 높다. 특히 경제 규모에 견준 통화량 역시 상대적으로 높다.

국내총생산(명목 GDP) 대비 통화량

(M2)이 153.8%(2025년 3분기 기준)로 여타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적완화가 잦은 미국 71.4%의 두 배 이상이자 유로 지역 108.5%를 압도하는 높은 수준이다.

실물 경제 규모에 비해 유통되는 시중 통화가 많다는 의미로 시중 통화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풀렸다고 볼 수 있다.

통화량 비율은 코로나19 이후 추세적으로 늘어 2023년 1분기 157.8%로 정점을 찍고 하락해 2024년 4분기 151.6%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다시 반등했다.

눈에 띄는 점은 코로나19 이후 물가 상승과 긴축(금리 인상) 이후에도 통화량 비율이 줄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2023년 1분기 149.1%에서 153.8%로 소폭 높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은 87.4%에서 71.4%로 줄었다.

유로 지역(126.7% → 108.5%)과 영국(135.8% → 105.8%)도 상당 폭 하락했다. 일본은 우리보다 높은 수준이나 통화량 비율(262.5% → 243.3%)은 감소(↓)했다. 20여 년 전 세계 최초로 '제로 금리'를 도입하며 돈 풀기로 내달린 일본(243.3%)의 'M2 비율'이 한국보다 높다.

하지만 엔화는 기축통화라는 점에서 단순 비교는 무리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주요국과 달리 성장률 대비 유동성이 더 확대된 셈이다.

이는 재정 확대와 금리 인하로 돈이 많이 풀려 원화 약세와 자산 가격의 상승을 부른다는 지적과 함께 장기간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한국 기준금리 연 2.5%가 미국 기준금리 3.50~3.75%보다

낮은 상태)을 방치한 결과라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무엇보다 한국만이 유일하게 M2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걱정을 키우고 있다. 지난해 1~3분기 한국의 M2 비중은 22%포인트 오른(↑) 데 반해, 일본(-5.7%포인트 ↓)·유로존(-2.0%포인트 ↓)·미국(-0.4%포인트 ↓) 등은 일제히 하락(↓)했다. 외환 당국이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개입해도 유독 원화가 약세를 면치 못하는 것과 맞아떨어지는 정황이 선명하다.

무려 32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로 월 100억 달러 안팎의 달러가 대량 유입되는데도 원·달러 환율은 재차 1,500원을 향해 치솟는 중이다.

통상 통화량은 물가를 통해 통화가치에 반영된다. 통화량 증가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물가가 오르면 구매력 하락으로 통화가치는 하락한다.

최근 고환율 여파로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소비자물가는 2%대 중반 수준으로 상승했다. 특히 M2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00%를 넘어선 뒤 가파르게 높아져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150%까지 돌파했다. 잠재성장률이 추락하고 예상 밖 사건이 터지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았겠지만, 너무 느슨한 관리 정황도 명백히 포착된다.

최근 3년간 한국의 M2 비율은 3.9%포인트 급등(↑)해 일본(-21.0%포인트 ↓) 유로존(-9.4%포인트 ↓) 미국(-7.9%포인트 ↓)의 급감(↓)과 분명한 대비를 이룬다. 통화량 증가는 서울 중심의 집값 급등 배경으로도 볼 수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통화량 증가 폭은

장기평균보다 높은 수준은 아니며, 특히 과거 금리 인하기에 견줘보면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특히 환율 상승 압력은 유동성 요인보다는 해외 증권투자 확대와 수출기업의 외화 보유 선호 등 외환시장의 수급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게 한국은행의 시각이다.

무엇보다 원화 약세를 서약개미와 국민연금 탓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원인과 결과의 혼동이 아닐 수 없다.

통화량 증발에 따른 원화 약세와 그로 인한 성장률 부진이 만재이고 해외 투자는 그에 따른 대응 차원이다. 최근 M2 증가율이 '장기평균'을 소폭 웃도는 수준이라는 해명도 장기평균의 과도한 방지를 스스로 고백해 불과하다.

금리를 올려 유동성을 줄이게 되는 경우는 한·미 간 성장률 격차가 확대돼 오히려 환율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진단도 내놓는다.

유동성 증가가 환율에 영향을 미치려면 물가상승률이 미국보다 높아 환율이 상승하는 경로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2%대 중반으로 3%를 넘는 미국보다 낮다는 주장이다.

물론 통화당국만의 책임이 아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금증을 불렀고 무엇보다 재정 당국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불가피하게 대규모 소비 쿠폰 살포를 반복해 온 건 사실이다.

이전 통화량 발(發) 원화 약세와 성장동력 약화의 악순환을 서둘러 끊어낼 때임을 각별 유념해야 한다.

작가·칼럼니스트(현,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 전, 서울특별시자치구공단이사장협의회 회장·전, 소방준감)

서울시, '애들아 과일 먹자' 역대 최대 규모 운영

우리 농가 판로 확보와 취약계층 아동 건강증진 '두 토끼' 잡아



서울시가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영양 지원 사업 '애들아 과일 먹자'를 2025년 역대 최대 규모로 추진한 결과, 아이들의 식습관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사업 확대 이후 과일·채소 섭취는 늘고, 단맛 음료와 패스트푸드 섭취는 줄어드는 등 뚜렷한 개선효과를 보였다.

'애들아 과일 먹자' 사업은 서울시가 2013년부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를 비롯해 ▲서울청과(주) ▲농협경제지구 가락공판장 ▲(주)중앙청과 ▲동화청과(주) ▲한국청과(주) ▲대아청과(주) ▲(주)희망나눔마켓 등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과 협력해 추진해온 민간협력 영양지원 사업이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정기적으로 제철 과일을 공급하고,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영양교육을 함께 제공한다.

2024년까지는 전체 지역아동센터의 절반 수준인 240개소, 6억 4천만 원 규모로 운영됐으나, 매년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와 아동기관의 수요가 이어지면서 2025년에는 서울시·자치구·민간 협력기관이 힘을 모아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2배(약 12억 원)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총 480개소 아동기관, 1만 3,952명의 아동이 정기적으로 제철 과채류를 제공받고 영양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1만 2천 명의 아동이 참여한 식생활 조사 결과를 분석해 기관별로 맞춤형 영양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지난 5월부터는 매주 2회 신선했던 제철 과채류를 각 기관에 공급해, 아이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과일과 친숙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그 결과 아이들의 식습관은 눈에 띄게 개선됐다. ▲영양표시 인지도와 활용률 ▲매일 과일·채소 섭취율 등 건강한 식생활 지표는 상승한 반면, ▲단맛 음료 ▲패스트푸드 ▲과자 섭취율은 감소하는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됐다.

사업 추진 이후 1만 2,805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식습관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됐다. 영양표시를 인지하는 비율은 59.8%에서 72.4%로, 이를 실제로 활용하는 비율도 32.6%에서 41.6%로 높아졌으며, 매일 과일을 섭취하는 비율은 23.5%에서 28.2%, 채소 섭취율은 33.6%에서 35.0%로 증가했다.

반면 주 1회 이상 단맛 음료 섭취율은 68.1%에서 66.6%로,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63.6%에서 62.2%, 과자 섭취율은 82.3%에서 80.6%로 낮아져 건강한 식생활 실천이 전반적으로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변화는 보호자들의 체감 평가에서도 확인됐다. 1만 2천 명의 보호자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아동 보호자의 77.9%가 사업 참여 이후 자녀의 영양 지식이 향상됐다고 답했으며, 전체 보호자의 92.9%가 사업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96%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 "평소 과일을 잘 먹지 않던 아이가 센터에서 제공되는 과일은 먹는다고 해서 안심이 됐어요" (강서8호기움센터 아동 보호자)

○ "물가 부담으로 과일 섭취가 쉽지 않았는데 이런 좋은 사업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예류준지역아동센터 아동 보호자)

○ "아이 건강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며, 영양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매우 만족합니다!" (대림2동 지역아동센터 아동 보호자)

현장에서 아이들을 직접 돌보는 아동기관 담당자들의 평가는 더욱 높았다. 담당자 5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담당자 만족도와 사업 지속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모두 98.6%로 나타나, '애들아 과일 먹자' 사업이 지역사회 돌봄 체계 내에서 핵심적인 영양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 "과일을 잘 먹지 않는 친구도 다른 친구들과 같이 먹으니 조금씩 시도해 보는 모습이 보여 좋았습니다." (관악1호점기움센터 관계자)

○ "과일을 잘 먹지 않던 친구들이 교육과 주기적으로 제공되는 과일을 통해 편식이 많이 개선되는 좋은 효과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광지역아동센터 관계자)

○ "다양한 과일 제공과 영양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식생활 개선에 도움이 된 것 같아 감사합니다" (희망주는지역아동센터 관계자)

이번 사업은 아동의 식생활 개선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함께, 국산 제철 과채류의 안정적인 공급처를 마련해 농가의 판로를 지원하는 등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상생하는 모델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진해신항, 북극항로 시대 '항만'을 넘어 경제권 중심지로 도약

조선·제조업·물류·배후 도시와 연계한 북극항로 거점 추진 방향 마련

북극항로 대비 속도 내는 경남, 사업 구체화 용역 추진

경상남도는 경남연구원이 수행한 진해신항 북극항로 정책연구과제를 토대로, 진해신항 북극항로 대응 및 거점 육성 추진 방향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경남도는 그간 정책연구와 세미나, 라운드테이블 등을 통해 북극항로 대응 전략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왔으며, 2026년부터는 '진해신항 북극항로 거점 육성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기후변화로 북극해 해빙이 가속화되면서 북극항로가 현실적인 상업 항로로 부상하고 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해상 물류 지형이 재편되는 가운데, 진해신항이 대한민국 북극항로 거점항만이자 조선·에너지·물류 산업을 결합한 신(新)경제권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다.

북극항로의 연간 운항 가능 기간은 현재 약 5개월 수준에서 2040년 이후 최대 6~9개월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극항로는 기존 수에즈운하 항로 대비 운항 거리는 40% 짧고, 기간은 10일, 비용 22%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 수에즈 운하(약 2만 2천km, 40일), 북극항로(약 1만 5천km, 30일)

정부는 북극항로를 미래 해양 전략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 중점 추진과제로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도약(국정과제 56)'을 제시했으며, 2026~2027년에는 북극항로 거점항만 조성을 위한 중장기 인프라 전략 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거점항만 조성 전략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진해신항은 2040년까지 총 15조 1천억 원이 투입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신항만 건설사업으로, 단일 항만 기준 세계적 수준의 확장성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조선·에너지·제조 산업이 집적된 경남의 산업 기반과 가덕도신공항·철도·고속도로를 연계한 트라이포트 물류망 구축 여건까지 더해지며 북극항로 거점항만으로서의 조건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다.



경남도가 구상하는 진해신항의 미래는 단순한 물류 거점에 머물지 않는다. 조선·제조·에너지·물류·도시 기능이 결합된 '북극항로 경제권' 조성이 핵심이다. 북극항로는 산업 구조 전환의 계기이며, 이에 도는 북극항로 시대에 필요한 산업 생태계를 함께 준비하고 있다.

경남도가 제시한 주요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MRO(수리·정비) 집적지와 극지 운항 선박 테스트베드 조성이다. 진해신항을 중심으로 건조-시험-정비-서비스에 이어지는 고부가가치 조선산업 체인을 완성하겠다는 전략이다.

극지 운항 선박은 고난도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로, 쇄빙선·극지운항 LNG선·친환경 연료 추진선은 글로벌 조선시장의 새로운 성장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조선·기자재 산업이 집적된 경남은 북극항로 조선·해양 산업 벨트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둘째, 피지컬 AI 기반 스마트 항만 구축과 항만 기계 국산화 클러스터 조성이다. 하역·야드 운영·안전관리 전반을 자동화·지능화하고, 항만 하역 장비와 운영시스템의 국산화를 통해 기계산업과 연계한 전략 산업을 육성한다.

스마트 항만 기술은 향후 해외 항만

수출 산업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크다.

셋째, LNG·메탄올·수소 등 친환경 연료 벙커링 단지 조성을 통한 북극항로 친환경 에너지 허브 구축이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 규제 강화로 친환경 연료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진해신항은 대규모 배후 부지를 활용해 저장·혼합·공급·안전관리를 아우르는 에너지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최적지로 평가된다.

넷째, 진해신항-가덕도신공항-철도망을 연계한 트라이포트 기반 복합물류체계구축과 국제물류특구 지정을 통해 제조·가공이 결합된 고부가 물류로 전환한다. 북극항로를 통해 유입된 화물을 항만·공항·철도로 신속히 분산하고, 가공·조립·재수출이 가능한 복합물류 거점을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복합 비즈니스 도시 조성 과 북극항로 테마를 연계한 남해안 해양관광 활성화이다. 북극항로 관련 공공기관과 글로벌 기업이 집적된 복합 비즈니스 지구와 연구·교육 클러스터를 아우르는 경제권을 구축하고, 남해안 해양관광 벨트와 연계한 차별화된 글로벌 해양관광 콘텐츠를 육성한다.

경남도는 앞으로 북극항로 협의체와 전담 TF를 운영하고, 정책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 계획을 구체화해 국가 전략

에 반영할 방침이다.

박성준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진해신항은 컨테이너 화물만 처리하는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조선·에너지·스마트 기술이 결합된 복합 산업 플랫폼 항만으로 진화하고 있다"라며 "진해신항이 북극항로 거점으로 조선·에너지·물류·도시가 결합된 새로운 경제권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K-헤리티지 인기 속

현장은 '공공'

지난해 궁궐과 조선왕릉 등 국가유산을 찾은 관람객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나,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국가유산청노조 서울·경기지부는 29일 성명서를 내고 "관람객 증가와 업무량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인력을 증원하고 재조정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최일선에서 책임지는 건 현장 공무원이지만, 국가유산청은 그 책임의 무게에 상응하는 행정·제도로 뒷받침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가하는 관람객 대응, 안전 관리, 시설 유지, 민원 처리까지 모든 부담은 현장 인력에 전가되고 있고, 인력 보강이나 제도 개선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궁·능 주 6일 개방과 국립고궁박물관 연중 무료 개방은 (현장) 인력과 업무 현실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된 제도"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인력 조정과 더불어 안전과 인력 상황, 휴관 일차 대책이 수반된 정책 수립, 현장과의 소통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가유산청 공능유적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찾은 관람객은 1천781만4천848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